유 영 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일자리는 보다 많이, 사회안전망은 빈틈없이

- working Poor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정책방향 -

경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경제가 힘차게 박동하고 있는 느낌이다. 연초에 나온 우리경제의 지난해 성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소폭이나마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역수지는 400억 달러를 넘어 이웃 일본을 제쳤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딛고 우리경제가 점차 정상화하고 있는 반가운 신호라 할만하다. 하지만 경제위기 여파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을 생각하면 새삼 마음이 무거워진다.

근로빈곤층은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계층이다. 이들은 실직 및 고용불안, 저임금 등 취약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는데다 기초생계위협과 이로 인한 가정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

이렇듯 고용-복지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지난해 2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IMF 대량실업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근로빈곤층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근로빈곤층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건강한 계층이지만 실제 삶의 수준은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빈곤문제를 개인의 사적문제로 취급하거나, 소극적인 국가 공적부조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근로와 복지의 연계 등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

일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정부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자활

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사업에서 역량을 기른 수급자는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통한 자활의 길을 열어주었다.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충성 원칙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되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05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 무담보소액대출사업과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09년 3분기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4만8천여명과 차상위계층 2만여명 등 약 6만 8천여명이 보건복지가족분야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향후 자활사업 참여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보건복지분야의 최우선 과제는 근로빈곤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있다. 먼저, "최고의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범정부차원의 역량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분야에서만 15만개의 일자리를 서민들에게 새로이 제공하여 일을 통해 극빈층으로의 추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 · 추진한다.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소규모 자활공동체의 기업화 · 규모화도 추진한다. 취업률 등 자활사업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는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수급대상에서 벗어난 가구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짜여진다. 특히 기초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본격 가동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장서서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전달되어 생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협조가 더해지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어려운 자를 배려하는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확산된다면 더불어 잘 사는 따뜻하고 건강한 선진사회가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